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광주 -1/3℃ 목포 -1/3℃ 여수 1/5℃

단기 4343년 (음력 11월 27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571호 1판 2010년 1월 11일 월요일

‘호남위기론’ 갈수록 확산

중앙인맥 몰락·예산 홀대·고강도 기업 구조조정

지역정치권 무기력 지방선거만 골몰
세종시 수정땐 균형발전 물건너갈 판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발표를 하루 앞둔 10일 광주·전남지역에 ‘호남 위기론’이 확산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출범 2년 동안 중앙 부처의 지역 인맥 위축, 지역 숙원사업의 예산 삭감, 지역 경제계 몰락 등이 이어진 상황에서 세종시 입주 기업에 대한 특혜가 주어지면 전남의 기업·혁신도시 조성은 물론 광주 첨단과학도시 도약 등에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함께 공평한 지원을 요구한다는 계획이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호남 위기론은 지난해 건설·조선사 구조조정 이후 갈수록 힘을 잃고 있는 지역 경제계의 현실에서 촉발됐다. 대주·삼능· C& 중공업 등이 유동성 부족으로 채권단에 의해 구조조정 기업으로 분류된 이후 건설·조선업이 크게 위축됐다. 더욱이 금호아시아나그룹마저 새해 들어 강력한 구조조정에 들어가 그룹 경영권까지 위태로운 지경이다.

지역민들은 이에 대해 정부 나름대로 기준과 원칙이 있겠지만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기업의 재생에 힘을 보태기보다는 너무 가혹한 잣대를 적용하지 있지않느냐고 걱정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크게 위축된 지역 인맥도 ‘호남 위기론’의 근거로 제기되고 있다. 김황식 감사원장, 이귀남 법무부 장관, 이만의 환경부 장관, 장태평 농림수산부장관 등이 있지만 정권의 핵심으로 보기 어려운데다 권력 기관이나 중앙 부처 핵심 부처에 포진했던 지역 인맥들이 사실상 몰락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민주당과 지역 정치권은 명분도 실리도 챙기지 못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호남 위기론’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실제로 민주당은 영남에 편향된 정부의 ‘5+2 광역경제권’ 계획을 저지하지 못한 것은 물론 2년 연속 한나라당 단독의 수정 예산안 통과마저 막지 못해 지역 예산 줄 삭감의 빌미를 주는 등 지역 발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 정치권도 과감한 문제 제기를 통한 정치적 비전 제시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눈 앞의 위기 타개보다는 다가오는 지방선거에만 골몰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 구상대로 세종시가 특혜형 기업도시로 건설되면 호남은 균형발전의 꿈은 물건너 갈 수 있다”며 “지역 정치권과 경제계가 한데 뭉쳐 위기를 타개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학교설립 56주년(1954~2010)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젊은 지성인의 교육의 요람!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조형물만 덩그러니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기념조형물이 세종시 수정안발표를 하루 앞둔 10일 나주시 혁신도시 홍보전시관 부지에 설치됐다. 당초 계획과는 달리 세종시가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건설될 경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주혁신도시의 미래를 예견하듯 조형물 주변이 황량하기만 하다. /김진수기자 jeans@

세종시 수정안 오늘 발표

야권·친박 반발 정국 요동

정부의 ‘세종시 수정’ 최종안이 11일 공개된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주재한 뒤 공중파 TV방송 3사와 YTN, MBN 등 케이블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세종시 수정안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관련 기사 3면〉

수정안에는 당초 원안에 담겼던 9부2처2청의 세종시 이전안을 백지화하는 대신 세종시를 자족 기능을 제고한 교육과학중심도시를 건설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종시에 투자·입주할 대기업과 중견기업 및 대학과 연구기관의 명단, 토지이용 계획,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내용, 주민 지원대책 등도 포함된다고 정부측은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충청권 등 비수도권의 반대가 만만치 않은데다 야권이 총력 저지에 나설 계획이어서 정국에 태풍전야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더욱이 혁신·기업도시가 차별을 받는다며 다른 지역으로까지 반발이 확산하고 여권 내부의 친박(친 박근혜)계까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하고 있어 정국이 요동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총리실, 한나라당 주류 측은 수도 분할의 비효율성, 세종시 수정에 따른 실효적 이득 등을 내세워 전방위 설득에 나서는 등 우호적 여론 확산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 총리,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 당·정·청 수뇌부 8명은 10일 밤 총리공관에서 회동을 갖고 수정안 발표 이후 대책 등을 논의키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대국민담화나 특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세종시 수정안의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총리도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뒤 대전 현충원을 참배하고 이어 대전 지역 방송3사와의 공동 대담을 통해 충청 지역민들에게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직접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상무지구에 가정법원

2012년 개설 목표 예산확보 나서
광주지법 서부지원 신설도 검토

좁은 청사로 인해 민원인들의 불만을 샀던 광주 법원에서 가정지원이 분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신도심 개발 등으로 인구 유입이 많아진 광산구를 중심으로 한 광주지법 서부지원 신설 여부도 법조계와 지역 정가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법원은 청사 안에 있는 가정지원을 광주 서구 상무지구로 이전키로 하고 설계, 예산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

고법은 광주 시청사 앞 등기국 뒤편에 이미 부지를 확보했으며, 건물 설계안을 확정해 법원행정처에 올렸다. 고법은 행정처가 설계안을 승인하면 내년 착공해 2012년 7월까지 가정지원을 준공할 방침이다. 새로 들어설 가정지원은 건축면적 1만7천여㎡가량으로, 가사재판 법정은 물론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병행할 공간도 갖춘다.

가정지원 신설로 만성적인 청사 공간 부족 문제가 일부 풀릴 것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는 여론도 나오고 있어 광주지역 내 지원 설치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광주지법 청사는 1994년 신축 뒤 재판부와 직원이 늘어나면서 법정 등 공간부족으로 민원인의 불만을 사왔다. 특히 형사법정 8개 가운데 3개는 법원, 검찰청 간 피고인 이동을 위한 지하통로와 피고인 대기실이 연결돼 있지 않아 도주 우려와 트인 공간에서 피고인 이동으로 인한 인권침해 등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인구와 사건 증가, 영광군 등 도서지역 주민의 불편, 나주 혁신도시 건설과 광주 광산구 수완지구 택지개발 등에 따른 인구 유입 등을 고려, 광주지법 서부지원을 신설해 법원 관할구역을 재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 서부지원이 설치될 경우 광산과 영광, 장성 등 인구 42만 명을 하나로 묶는 방안과 광산, 나주, 영광, 장성 등 4개 시·군을 관할하는 2가지 안이 설득력 있게 거론되고 있다.

광주 한 법조계 관계자는 “좁은 청사, 도농 복합도시의 특수성 등을 생각하면 광주와 인근 전남 시·군을 광주지법이 관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광산구 지역에 서부지원이 들어선다면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